

일본 문화관광정책

: 2011년과 2012년

정인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일본통신원)

최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일본통신원)

| | | |
|----|-----------------------|----|
| I | 일본 문화정책: 2011년과 2012년 | 1 |
| II | 일본 관광정책: 2011년과 2012년 | 10 |

I 일본 문화정책: 2011년과 2012년

정인선 (도쿄대 문화자원학과 박사과정)

1. 머리말

- 2011년은 일본의 문화 정책에 있어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 2011년은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기록적인 해로, 이는 문화정책 부문에도 예외 없이 많은 영향을 끼침
 - 또한 <제3차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이 발표된 해로, 본 방침은 2007년 2차 기본방침 발표 후 4년 만이며, 민주당 집권 후 처음 발표된 문화정책 플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음

2.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시장 변화

1) 3·11 대지진 이후 문화사업 및 예산 변화

-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등 대부분의 영역이 재해지 복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문화 부문도 예외가 아님
 - 향후 5년 간 재해지 복구 및 부흥에 19조 엔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기에, 이로 인한 문화 부문의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재정재건 하에서의 문화예산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을 위해 예산 삭감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문화정책은 문화권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의료나 복지와 마찬가지로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게 됨
- 대지진에서 비롯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역시 각종 피해를 발생시킴

- 해외 예술가의 일본 방문이 상당수 취소되어 레지던시 사업 등의 전개에 어려움이 있었음
- 무엇보다 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로 인해 계획정전까지 실시되면서, 2011년 상반기에는 자숙하는 분위기가 일본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됨
- 이러한 분위기에서, 재해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문화 축제·이벤트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실제로 문화 활동 부분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을 보임
- 재해 직후인 4월 12일, 콘도 세이이치(近藤誠一) 문화청 장관이 발표한 “당면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음¹⁾
 - 장관은 발표문에서 “이러한 분위기일수록 오히려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이 일어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력을 되찾고, 이것이 결국 일본 전체의 건강한 부활을 가져올 것” 이라고 언급함
 - 이처럼,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재해지 주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작업이 필요함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음
- 지난 12월 16일에 있었던 제5회 일본 문화정책학회에서는 메인 심포지엄으로 <문화의 부흥/문화에 의한 부흥 -재해 후의 문화정책을 생각한다->를 개최함
 - 이러한 긴급사태에서 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맞서, 문화시설이나 문화사업, 전통문화 등이 이후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음
- 문화청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경우, 전체 예산 총액은 줄지 않았으나(개산 요구액 기준), 기존 문화청 사업의 일부는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없었음(2012년 예산기준)
 - 이는 정부 방침 자체가 모든 부처에 대해 기존 사업비 중 10%를 삭감하고, 그 1.5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본재생중점화조치> 특별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임

1) “当面の文化芸術活動について” (http://www.bunka.go.jp/bunkazai/chokan_message_110412.html)

- 뿐만 아니라 이와테현, 미야자키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처럼 직접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만을 정책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다수 포진 됨²⁾
 - － 이는 피해지역 지자체가 문화 정책 부문까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들 지역의 문화 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2) 3·11 대지진 이후 예술프로젝트의 활성화

-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 복구로 인해 문화부문의 정책이나 활동이 대폭 위축되었다고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 문화예산은 축소되었으나, 문화재 등의 레스큐(긴급구호)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음
 - － 일반 시민, NPO,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문화 지원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히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예술가나 디자이너가 재해지로 찾아가 피해지역의 아이들과 워크숍 형식으로 작품 제작 등을 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 무엇보다 큰 성과는 이러한 예술 프로젝트의 주체가 처음에는 재해를 입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이 재해지로 들어와 예술활동을 한 것이, 점차 그 주체가 해당 지역 지자체로 옮겨가고 있는 것임³⁾
- 기업 메세나협의회는 지진발생 직후인 3월 23일 GB 펀드(동일본 대지진 예술, 문화에 의한 부흥 지원 펀드)⁴⁾를 개설하여,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함
 - － 총 기부액 4천 5백 63만 엔이 조성되어(12월20일 기준), 89개 문화예술단

2) 일본문화청 2012년 예산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11.17), 「2012년 일본 문화청 예산」,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제 2011-21호를 참조

3) 久木元拓(2011), <プロジェクトFUKUSIMA! にみる組織の価値生成とサステナビリティについて>, 2011年日本文化政策学会

4) G는 예술(藝術, Geijutsu), B는 문화(文化, Bunka)를 의미하며, 로고에서 강조된 F는 펀드와 부흥(復興, Fukkou)을 동시에 의미함. GB펀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10.20), 「해외동향: 문화분야 기부 활성화 사례」,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제 2011-16호 중 필자의 “일본 문화예술 분야 기부 현황 및 사례”를 참조

- 체를 지원⁵⁾하여 재해지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지는 것을 도움
- 이러한 점에서 2011년은 오히려 3·11 대지진을 통해, 숨어 있던 문화활동의 주체들이 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음
 - － 민간과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해 준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문화예술진흥 기본방침과 진흥기금의 평가기능 강화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방침 및 문제점

- 2011년 2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제3차)이 세워짐⁶⁾
 - － 그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책이 보다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독립행정법인 일본 문화예술진흥회의 전문가에 의한 심사, 사후 평가,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외국의 아트카운슬(Art Council)에 상당하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것임
 - －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조속히 실시함과 동시에,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 작업을 실시한다.” 는 방침이었음
- 한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일본 문화예술진흥회는 <문화예술활동 조성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설치하여 지난 6월 보고서를 펴냈으며, 보고서에서 지적한 현재의 조성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 조성 대상 사업의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이 3년 단위로 교체되기 때문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움
 - － 설립기간이 짧은 단체는 심사위원의 눈에 띄기 어려워 불리할 가능성이 있음
 - － 모집 시에 심사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심사 기준이 불투명 함

5) <http://arts-fukkou.blogspot.com/>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4.10), 「해외동향: 프랑스와 일본의 문화예술정책 비전」,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제 2011-06호 중 필자의 “일본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제3차 기본방침” 참조

- 다수의 요망서를 한정된 기간에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상호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어려움
- 현재, 전문위원회의 위원과 진흥회 기금부의 사무직원이 시행하고 있는 사후 평가에 대해, 공연조사의 실시율이 낮고 지방의 공연조사가 적게 이루어짐
- 사후 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조성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이나 평가가 불충분함
- 전문위원회에서 낸 경비나 건적 등에 관한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 조성금액을 결정할 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공연조사에 관한 조사보고 등의 내용이 다음 해 심사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조사대상 분야의 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의 축적이나 분석이 불충분함

2) 새로운 심사 및 평가시스템의 도입

-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을 두고 아트카운슬 설치의 전 단계로서, 새로운 심사 및 평가시스템을 시행함
 - 올해부터 PD(프로그램 디렉터)와 PO(프로그램 오피서)를 배치하여 문화청 사업 <최고 수준(Top Level)의 문화예술창조사업> 중 음악과 무용의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적용함
 - 2012년에는 대상 분야를 음악, 무용에 연극, 전통예술 및 대중예술을 더해 4분야로 확대하는 안(案)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새로운 제도를 통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둔 심사과정과 결과에 따른 세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 다음 회의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PD, PO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통해 사업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됨
 - PD나 PO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PD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조사연구를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 문화

예술진흥회가 실시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성사업의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4. ‘새로운 공공’과 개정 NPO법

1) 새로운 공공의 등장

- 앞서 설명한 평가제도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은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세금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부터 찾을 수 있음
- 제3차 기본방침 중 <중점전략 1>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 부분은 이러한 시책이 잘 담겨 있음

○ <중점전략 1>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수입의 증가 등의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심사, 평가체제의 불충분이라고 하는 조성 부문의 문제점, 감상 기회 등의 지역 간 격차, 지역 공공단체에 있어 문화예술예산의 삭감 등의 현상, 그리고 새로운 공공 등 최근의 경향에 기반을 두고, 발본적인 개선,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조성 방법을 개선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 실행, 검증, 개선의 사이클을 확립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뿐 아니라 민간이나 개인에 의한 지원과 문화예술 각 분야에 있어 새로운 공공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2011년, 문화정책을 뜨겁게 달구었던 하나의 키워드는 ‘새로운 공공’
 - 제3차 기본방침에 ‘새로운 공공’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함
- 이는 기업 메세나나 NPO 등의 민간 부문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주체로서 민간을 국가(공공영역)와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음

- 결국 ‘새로운 공공’ 은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정책 참여 진흥, 제 3섹터와의 적극적 공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축소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음
 - 2011년 한 해 동안의 흐름으로 볼 때, ‘새로운 공공’ 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전자의 경향을 띠
- 2011년 6월 개정된 NPO법 등은 3·11 대지진 이후, 재해의 복구와 부흥에 있어 시민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줌

2) NPO 법의 제정 및 개정

- 일본에서 NPO법, 즉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 제정된 것은 1998년으로, 한신 대지진이 있었던 1995년에서 3년이 지난 시점이었음
 - 당시 NPO법 제정의 배경에는 한신 대지진의 영향이 매우 컸는데, 이는 지진 복구를 위한 자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NPO법의 목적은 “볼런티어 활동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특정 비영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한 것
- NPO법 실시 이후 NPO법인은 2010년을 기준으로 42,387개에 달하고 있음
- 한편, NPO법 제정 3년 후인 2001년에는 ‘인정 NPO법인 제도’ 가 실시됨
 - 이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NPO법인에 대해 기부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였으나, 이러한 기부 우대세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정 NPO법인’ 이 되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전체 4만여 개 NPO법인 중 215개(전체의 0.5%)만이 그 대상이 됨
 - 그마저도 도쿄에 반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도 있어왔으나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새로운 공공’ 과 3·11 대지진으로 인한 NPO법의 개정
 - 민주당 집권 후 ‘새로운 공공’ 전략과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기부 촉진과 볼런티어 활동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2011년 6월, 마침내 NPO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개정된 NPO법에서는 활동 분야가 넓어졌으며, 인정 NPO법인이 되기 위한 퍼블릭 서포트 테스트(PST)의 기준도 완화됨
 - 활동 분야는 현재의 17개 분야에서 20개 분야로 넓어져, 관광 진흥 활동, 농산어촌 진흥 활동, 도도부현(都道府県) 혹은 정령(政令)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활동이 추가됨
 - 또한, 가인정 제도가 생겨 조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법도 개정되어 기부한 금액으로부터 2천 엔을 뺀 금액의 4할(주민세분도 포함하면 5할)의 세액이 공제됨

5. 2012년 전망

- 3·11 대지진은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하쿠호도(博報堂) 생활종합연구소가 한 조사에 이러한 변화가 잘 나타나 있음
 -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거주하는 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한 〈Life After 3.11〉이라는 조사에 따르면, 3·11 지진 이후 ‘세상에는 걱정할 것, 불안한 것이 많다’ 고 생각한 사람이 증가함
 - 반면 ‘세상에는 싫은 것, 화나는 일이 많다’ 고 생각한 사람은 줄어 ‘불평하지 말고 현실을 살아나가겠다’ 는 가치관이 부상하고 있음
 - 또한, ‘사회전체를 위해서는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무언가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 는 의식이 지진 이후 크게 상승함
-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문화 영역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2012년도에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음
- 3차 기본 계획이 대지진과 글로벌 경제 악화의 악재 속에서도 문화 부문의 예산 증가 혹은 유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문화의 파급력에 주목하며 문화가 일본을 재생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 부문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

감하고 있는 상황

- 다행히 2012년의 문화청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으나, 재해지의 문화 활동 지원이나 재해지 문화재 복구 사업에 상당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새로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꺾어가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이러한 엄격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기업메세나협의회 <http://arts-fukkou.blogspot.com/>
- 문화부예술문화과장 야마자키 히데야스(山崎秀保), “文化芸術への助成に係る新たな審査・評価等の仕組み”, 월간 문화청 월보 2011년 10월호
- 문화예술활동 조성의 심사, 평가에 관한 심사위원회, <문화예술활동의 조성에 있어 새로운 심사, 평가 등의 방법에 대해> 2011년 6월
- “NPO법 개정안, 전원 일치 합의”, NPOWEB, 2011년 6월 15일
- <Life After 3.11 : 시계열 조사로 보는 가치관 변화와 생활의 진로>, 하쿠호도 생활종합연구소
- 쿠키모토타쿠(久木元拓)(2011), <프로젝트 FUKUSIMA!로 보는 조직의 가치생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2011년 일본 문화정책학회

Ⅱ 일본 관광정책: 2011년과 2012년

최 영(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서비스공학연구센터 연구원)

1. 들어가며

1)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

- 일본 정부는 2003년 4월에 시행된 ‘VISIT JAPAN’ 캠페인⁷⁾을 시작으로 하여 인바운드 관광의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을 추진함으로써 쇠퇴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왔음
- 2006년 관광입국 추진 기본법 성립, 2008년 관광청 설치, 2010년 국토교통성장전략 회의 개최를 통한 신성장전략의 추진은, 관광을 핵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일본정부의 의중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 신성장전략에서는 관광입국 및 지역활성화 전략을 7가지 중점 전략 중 하나로 둬
 - － 이는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방일 외국인 3,000만 명 프로그램 및 휴가취득의 분산화 추진을 선정하고 있음

2)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시장 변화

-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추진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 이로 인해 일본의 국내외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됨
 - － 일본정부는 위기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대지진 발생 직후인 2011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선언을 통해 2015년까지 3국간의 인적교류 규모를

7) 2003년 1월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시정방침연설에서 2010년까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1,000만 명(당시의 2배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하여 시작되었음.
(관광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mlit.go.jp/kankocho/shisaku/kokusai/vjc.html>)

2,60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함

- 2011년 8월, 일본 재생을 위한 전략이 수립됨
 - － 이 전략은 해외언론과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활발한 정보발신과 해외 관광당국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PR활동의 강화, 직장인의 휴가취득 분산화를 통한 국내 관광 수요 환기를 주요내용으로 함
- 2012년 일본의 관광정책은 지진피해로 인해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이 전개될 것임
 - － 국내관광수요 환기를 위한 휴가분산 확대 시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 앞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활동이 예상됨
- 2011년 일본정부가 추진해온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의 내용 및 민간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2012년에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활동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2. 2011년 일본정부 관광시책

- 일본의 관광정책과 관련된 주요 국가기관은 관광청, 국토교통성, 문화청, 문부과학성을 들 수 있음
 - － 이들 기관을 통해 추진된 관광관련 시책은 크게 국제관광의 진흥, 국제경쟁력의 고도화 및 매력 있는 관광지의 형성, 관광여행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짐

1) 국제 관광 진흥

- 동일본대지진 이후, 국외 관광객 감소와 교류 단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 관광진흥과 관련된 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음
- 관광청이 주관한 방일외국인 3,000만 명 프로그램 제 1기는 2019년까지 방일 외국인을 2,500만 명으로 확대하여 신규고용을 56만 명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종적으로는 방일외국인을 3,000만 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책임
- 제1단계로 2013년까지 방일외국인 1,500만 명을 달성하고, 외국인 방문객의 소비 유발을 통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 내 경제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일본 국제관광의 5대 주요시장(한국, 중국, 타이완, 홍콩, 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 대한 프로모션 추진, 해외 미디어의 일본 초청, 현지 미디어에 일본관광 관련 광고 게재 등의 PR활동을 내용으로 함
- 문화와 콘텐츠를 활용해 일본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문화예술관련 인사를 통해 일본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동아시아 문화예술회의⁸⁾ 개최(문화청 주관), 영상국제방송 실시 및 지역콘텐츠의 해외전개 프로젝트(총무성 주관) 등을 진행함
- 공항과 항만에서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상입국심사를 확대하고, 입국 심사관 수를 확대하는 등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시책이 법무성에 의해 추진되었음

2) 국제경쟁력의 고도화 및 매력 있는 관광지의 형성

- 각 시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 있는 관광지의 형성,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교류인구 확대, 지역발전 도모를 목표로 함
 - 각 지역의 관광지를 광역적으로 연계하고 관광권을 정비함으로써,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루어짐
- 관광청이 주관한 관광지역만들기 플랫폼 형성 사업⁹⁾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착지형) 관광상품의 기획과 판매를 위한 법인 사업체 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임
- 문화유산을 활용한 시책으로는 관광진흥 및 지역활성화 사업(문화청), 국제스

8)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인, 예술가, 학자, 저널리스트 등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문화관련 회의로서 각종 문화관련 행사를 일시에 개최

9) 여행지의 지역축이 주체가 되어 각종체험 및 지역산품 등 지역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여행상품을 의미함

(관광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mlit.go.jp/kankocho/shisaku/kankochi/platform.html>)

포즈캠프 유치 및 개최지원(문부과학성)이 있음

- 이 밖에 여객선 터미널과 신칸센 정비사업, 공항 정비 및 활용관련 사업(국토교통성)과 산업 활성화와 신사업 창출 지원사업(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됨

3) 관광여행의 촉진을 위한 환경의 정비

- 국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장치로서 직장인 휴가취득 용이화 및 관광여행상품과 환경정비, 정보전달과 관련된 시책이 실시됨
- 관광청은 워크 앤 라이프의 균형실현¹⁰⁾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홍보활동과 관광통계 데이터 정비를 실행하였으며, 후생노동성에서도 중소기업주를 대상으로 직원의 유급휴가 취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됨

3. 민간 활동: 지진피해지역을 응원하는 관광상품과 이벤트 등장

-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동북지역에는 쓰나미로 인한 피해복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관광회사와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투어를 기획하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음
 - 자원봉사 관광은 주로 2박 3일 혹은 3박 4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무너진 건물 잔해를 정리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지진 피해자의 체험담을 듣거나 피해상황을 시찰하고, 피해지역 근교 숙박시설에서의 숙박, 식사와 상품구입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임
-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동북지역의 식재료에 대한 불신이

10) 남녀노소 모두가 직장, 가정생활, 지역생활, 자기발전 등의 여러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희망하는 균형을 전개하는 상태
(내각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8.cao.go.jp/wlb/government/top/change/k_7/pdf/s3-1.pdf)

확산되는 가운데,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의 식재료를 PR하기 위한 이벤트도 기획되고 있음

- 이와테현 하나마키시에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 연안부를 응원하는 이벤트(Eat and Smile! Sanriku)가 개최될 예정임(그림 1)
- 이벤트에는 유명 요리사(미쉐린 가이드 동경 등제)가 참가하여 지역산 식재료로 요리를 선보이는 등 일반에 화제를 모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임

- 동북지역 및 지진피해지역의 식재료를 PR하는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기획되고 실행될 것으로 보임



[그림 13] Eat and Smile
Sanriku 행사 포스터

(출처: 동북관광진흥포털사이트 <http://www.tohokukanko-fukkou.jp/article-1996/>)

4. 2012년 일본정부의 관광시책 전망

- 관광청은 방일 외국인 확대 및 국내관광수요 환기와 관광 인프라 정비를 위한 시책을 2012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요구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내년의 추진시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망함

1) 해외시장에 대한 리서치

- 관광청은 마케팅리서치와 K P I (Key performance indicator)에 의한 프로모션 효과 측정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외프로모션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VISIT JAPAN’ 캠페인의 방일여행촉진 효과에 대하여 각 해외시장의 발전단계와 방일여행의 전략을 모색하고, 프로모션의 방향을 차별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

〈표 4〉 방일여행촉진의 고도화를 위한 시장세분화

| | 유망시장 → | 고성장시장 → | 재방문시장 | 안정시장 | 부유층 |
|-------------|---------------------------------|-------------------------------------|--|----------------------------|--------------------|
| 목표 | 앞으로 증가할 여행객의 흡수를 위해 기본적인 상품을 구성 | 급증하는 중산층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모션 실시 | 일본 재방문 여행객의 증가를 위해 보다 다양한 매력의 발신과 상품 개발 실시 | 일본여행의 매력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전달 | 막대한 소비가 기대되는 층을 확대 |
| 중점시책 | 투어조성의 지원 | 여행박람회출전, 투어조성 지원, 광고선전 | 현지 미디어의 초대, 지역연계 사업 | 여행박람회, 미디어초대 | 여행박람회, 미디어초대 |
| 현행 중점 15개시장 | 인도, 러시아 | 중국, 내국, 말레이시아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 |
| 앞으로의 시장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 | | | 이탈리아, 스페인 | 사우디아라비아, UAE |

자료: 2012년도 관광관련 예산개요 요구자료

2) Fly to Japan! 사업 추진

- ‘Fly to Japan!’ 사업은 일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재해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전히 방사능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방일 촉진을 위해 전 세계에서 10,000명의 외국인을 초청하는 이벤트임

- 선정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방일 항공권을 제공하며, 일본 체제 중 SNS 등을 이용한 정보 발신을 통해, 안심하고 여행 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일본을 어필하는 것이 주목적임
- 응모자에 대한 일본여행의 이미지,, 일본 내의 숙박 및 쇼핑에 대한 지출계획을 조사하여 도출된 결과를 방일 이미지 회복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방일 후의 감상 등에 대한 데이터도 취득하여 분석할 계획임

3) 관광지역만들기 플랫폼 형성사업

- 지역관계자를 활용한 활동지원 체제의 지속적인 추진
 - 관광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진흥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구분 짓지 않고, 광역지역의 여러 관계자가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고, 관광객에게 장기간 체류하는 관광형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지진피해지역인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3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을 통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함
 - 보조대상은 관광지역만들기 플랫폼 혹은 관광권정비법에 의거해 결성된 협의회로, 구체적으로는 지역 여행상품의 기획과 개발, 판매촉진, 체험 교류 학습의 추진, 인재육성, 정보제공과 숙박시설의 정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

4) 관광인재의 육성: 관광중핵인재 육성사업

- 관련 사업의 경영 및 담당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광 관련교재의 작성과 전문 지도자의 확충, 연수 등 인재육성의 보급 및 정착을 꾀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지역관광을 위해 활약할 예비후보자 육성을 위해 대학에 공개강좌를 늘려갈 예정임
 - 관광지역만들기를 실천하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지도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교육을 추진하며, 선진적인 지역에 인재를 파견하여 연수를 통한 노하우를 쌓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림 14] 대학의 관광인재 육성과 관련된 공개강좌 및 파견 연수 현장

5) 워크라이프 균형의 실현을 위한 휴가개혁 추진: 지방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과의 시간만들기 촉진사업

- 이는 휴가 혹은 방학일정을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추진하는 사업임
 - 직장인을 대상으로, 휴가취득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휴가이용 분산화를 장려하기 위해 부모(기업)의 휴가와 자녀(학교)의 방학일정을 조정함
 - 2012년은 그간 추진해온 2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미디어를 이용한 휴가개혁 관련정보 발신과 과제의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5. 나가며

- 일본인의 국내여행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외국인 관광객을 2019년까지 2,500만 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현 추진 중인 시책의 내용과 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관광청은 2012년도에 올해 예산액에 비하여 약 8% 증가한 예산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유치를 위하여 각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모션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VISIT JAPAN’ 캠페인이 2003년에 개시되어, 약 10년 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간의 노하우를 살린 전략적인 추진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온 것으로 풀이됨
- ‘Fly to Japan!’ 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초청이벤트의 기획 등을 통해 해외 각국에 일본 관광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정보발신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수습과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 식품 안전성의 확대 등 남겨진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이밖에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만들기 플랫폼구축 등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여행상품 개발과 관광 인재육성 등을 통한 복구와 부흥에 관련된 예산집행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관광청 홈페이지
 - <http://www.mlit.go.jp/kankocho/siryou/yosan/youbou.html>
 - <http://www.mlit.go.jp/kankocho/shisaku/kokusai/vjc.html>
 - <http://www.mlit.go.jp/kankocho/shisaku/kankochi/platform.html>
 - <http://www.mlit.go.jp/kankocho/siryou/yosan/kanren.html>
- 일본여행업협회 홈페이지
 - http://www.jata-net.or.jp/about/topics/2010/forum/pdf/pdiscussion_f.pdf
- 동북관광진흥 포털사이트
 - <http://www.tohokukanko-fukkou.jp/article-1996/>
- 내각부 홈페이지
 - <http://www.cao.go.jp/sasshin/oshirase/pdf/nov27-pm-shiryo/1-73.pdf>
 - http://www8.cao.go.jp/wlb/government/top/change/k_7/pdf/s3-1.pdf